

일자리정책 연계 청년일자리 확대

“기본료 폐지 포기 안 해”

전북도, 실무·현장중심 토론회 개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정책 발굴·협력 강화키로

전북도는 23일 '새정부 일자리 정책과 전북 청년일자리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와 시군 일자리관련 부서장,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과 전북도의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한 새 정부 정책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청년일자리 확대와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실무·현장중심의 토론회로 진행됐다.

도는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신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및 지원인원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및 지원인원 확대, 4차 산업혁명대비 인력양성 지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에서도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소재산업 육성, 식품·종자·미생물·ICT농기계·첨단농업 등 스마트 농생명산업 및 미래형 상용차(자율주행) 기술 개발, 연금금 융융타운과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 등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청년이 우리지역에서 내일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2017년도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방안으로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 청년 취업연계 강화, 직업능력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및 개발 등 4개 분야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와 양극화 문제, 계층 간 일자리 갈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적인 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못지않게 일자리를 지키

는 일도 중요하므로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행정을 통한 도민(기업) 애로해소에도 적극 관심을 갖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춰 도, 시군, 대학 및 유관기관 등이 더욱 협력하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일자리가 있어 다시 전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뿐 아니라 도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의 발굴·시행을 위해 다함께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최민희 자문위원, “MB정부도 인하여 3년 걸러”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후대전환 기본료 폐지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 기본료 1000원을 내리는 데 3년이 걸렸다”고 반박했다.

전날 국정기획위는 선택약정할인을 25% 상향, 취약계층 통신요금 인하 등의 방안을 담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q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포기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기본료 인하여 3년이 걸린 데 대해 “정부가 가진 시행령 안정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의 발굴·시행을 위해 다함께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그는 “시민단체와 업계, 전문가들이 들어간 사회적 논의기구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기본료 폐지 협의의 틀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답합구조 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가격담합 등에 대한 시장조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할인을 인상 결정에 대해 통신 3사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란 언론 보도와 관련, 최 위원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송동신위원회(미방위) 위원이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노력해서 12%였던 할인을 20%로 올렸다”며 “전 정부가 8% 올렸을 때 가만히 계서던 분들이 새 정부 들어서서 5% 올리겠다는데 소송을 운운하는 게 무슨 일이나. 전 정부 8%는 문제가 안 되고, 새 정부 5%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뉴스1

대통령, 현무-2C 시험발사 참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C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했다.

현무-2C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시 선제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 핵심무기체계다.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계열의 탄도 미사일에는 실전배치된 현무-2A(사거리 300km 이상)와 현무-2B(500km 이상)가 있다. 현무-2C(사거리 800km)는 연내 전력화를 목표로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다. 군은 한국군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키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직후 사거리 800km의 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왔다.

지난 4월 실시한 시험발사 때는 사거리 800km를 날려보내는데 성공했고, 이날은 최대 탄두중량 500kg를 채운 상태에서 800km를 보내는 데 성공했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발사된 현무-2C는 800km를 날아 이어도 남방 60여km 지점에 떨어졌다고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ADD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한 날이다. 과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 어느 정도인지 국민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인 나도 궁금했는데 우리 군의 미사일능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이 안심하시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든든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포용정책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안보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ADD가 연구 개발하는 무기체계는 대화나 평화수단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발사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 지난 23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에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가 시험발사 되고 있다.

‘철저한 초동대응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전북 재난안전 포럼’ 개최

전북도는 23일,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철저한 초동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방안’을 주제로 ‘제5차 전북 재난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도, 시군 재난안전 부서와 13개 협업부서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오경룡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정보화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소승영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와

시군 재난안전과장, 대학 등에서 토론이 있었다.

플로어에서는 재난초기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서 오경룡 국민안전처 정보화팀장은 국민안전처에서는 국가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으로, 소방, 해경, 중대본 등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 재난에 신속, 정확한 분석 및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초동대응 시스템을 마련,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상황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진성 기자

‘대기오염 저감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도-대기배출사업장 23개소

전북도는 23일, 도내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종 사업장 중 23개소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도내 미세먼지가 높고, 도민 건강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는 데 인식을 같이해 협약에 참여했다.

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반응하여 2차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인 황산화

물과 질소산화물도 아울러 저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발전업 4개소, 화학제품 제조업 8개소, 음식료품 3개소, 비금속물질 제조 2개소, 기타 6개소 등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과거 평균배출량 대비 연차별 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운영, 시설개선, 연료전환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총 5,078톤의 오염물질을 저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평균 529여억원을

투자하는 등 오염물질 감축 노력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고농도 시기인 봄과 겨울철에는 사업장 자체점검을 활성화해 정상가동 여부 등을 수시 확인하는 등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 중 연차별 감축목표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도지사 표창 등을 실시하고, 기업별로 설정한 감축목표의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